

# 전남 다문화학생 개인정보 과잉 수집

전남 다문화학생 1만명 시대를 앞둔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다문화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해 불의를 빚고 있다.

도 교육청은 "전남도의회 자료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1차적 책임을 도의회로 넘기고 있지만, 인권 침해 논란이 다분한 자료를 무분별하게 전수 취합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비켜가기 어렵다.

1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 3월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일반고와 특성고, 자율고 등 142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최근 3년 간 다문화학생 대학 진학 상세 현황을 요구했다. 전남지역 다문화 가정 고3 학생은 300~400명으로 추산된다.

도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지역과 진학년도, 출신 학교, 학생 성명, 대학 진학 여부(O, X), 대학이름과 학과명을 모두 기입해 제출토록 했

## 도교육청, 고3 300~400명 진학 현황 전수조사 성명, 출신 학교, 大入 여부, 대학·학과명 등 요구 "과도한 개인정보" "왜 다문화만? 불필요한 오해"

다. 해당 학년도에 재학했던 다문화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행을 추가해 모두 작성해 달라'는 자료 작성요령도 친절하게 안내했다.

그러면서 공문 제목에 '전남도의회 000 의원 요구자료'라며 고등학교는 8일까지, 지역교육청은 학교별 현황에 다문화지원 정책을 더해 1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지적과 함께 다문화학생들만 꼭 집어 자료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구별짓기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국정감사, 행정

사무감사 때도 지역별 진학생 수 정도만 조짐조사 요구하고 또 고심 속에 제출하고 하는데 학생 개인의 성명과 출신 학교, 대학과 학과까지 빠짐없이 제출해 달라는 건 처음있는 일"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전수조사임에도 주말과 휴일을 빼면 단 사흘만 부여한 점에서 "오히려 일선 학교의 업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사고 있다.

광역의원의 무리한 자료요구에 교육당국이 적절한 제동을 걸지 못한 채 일선 교육 현장으로 여과없이 전달했다는 점에도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일자 도 교육청은 감사실에 유권해석을 요구했고, "과도한 자료 수집으로 취합하신 안된다"는 감사위원단이 내려지자 뒤늦게 지난 9일 일선 시·군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수정공문을 보내 학생이름과 진학 대학·학과를 모두 빼고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선행공문을 통해 인권침해성 자료를 대부분 취합한 뒤에 이뤄진 '때늦은 조치'였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 정책 활용 차원에서 자료를 취합한 것인데, 개인정보와 인권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 유권해석을 거쳐 수정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에는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교 1181곳에 9789명의 다문화학생이 재학 중이다. 전남 전체 학생의 4.4%에 달한다.

김정환 기자

## 성추행·폭언 교사 3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광주 북부경찰서는 학생들을 추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위반)로 지역 모 중학교 교사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사 3명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들을 추행하거나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교사 3명은 학생의 신체 일부를 추행하거나 수업시간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전수조사를 거쳐 이 중학교 교사 18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교사 4명을 집중조사해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교사 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

## 아버지·노부부 살해 30대 아들 검찰 송치

충남지방경찰청은 15일 아버지와 노부부를 살해한 30대 아들 A씨(31)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공범 B씨(34)와 함께 서천군에 거주한 아버지(66)를 흉기로 찌르고 집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와 지난 5일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인천에서 80대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A씨는 "아버지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하였다"라고 진술했으며 공범 B씨는 "범행 수법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아버지 집에서 훔친 카드로 귀금속을 구매 후 처분해 수익금을 나눠 가졌으며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 노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치는 등 범행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범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가담 내용 등 보강 수사 후 이번주 내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건방지다" 친구 2명 흉기 찌른 20대 영장

술을 마시고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건방지다는 이유로 흉기로 친구를 수차례 찌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로 친구를 수차례 찌르고 말리던 일행을 다치게 한 A(28)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인천 계양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사소한 말다툼 중 건방지다는 이유로 흉기로 친구 B(28)씨의 어깨 등을 8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말리던 C(24)씨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대구 아파트 쓰레기장서 러시아제 총탄 발견

대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민간용 소총탄이 발견됐다. 15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수성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소총탄 29발이 든 탄창이 발견됐다.

군과 경찰의 조사 결과 발견된 총탄은 러시아에서 제작된 민간용 AK소총 실탄(7.62mm)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총탄은 사냥 등에 주로 쓰이며 해외에서는 민간인 사이에서 흔히 거래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경찰은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전국 전원주택 돌며 금품 상습 절도 일당 구속

전국의 농촌지역 전원주택을 돌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전국의 농촌지역 전원주택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 등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B(46)씨를 같은 혐의로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북 상주와 경기 용인, 충남 공주 등의 전원주택에 침입해 총 11회에 금품(시가 2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감식하러 들어가는 합동감식팀. 전날 오후 4시 천안 서북구 쌍용동 라마다양코르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15일 오후 소방청,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과수 등 합동감식팀이 현장 감식을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보복폭행 수도권·광주조폭 35명 전원 검거·28명 구속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보복폭행을 한 수도권과 광주지역 조폭 35명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다른 폭력조직원을 감금·폭행·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로 인천·광주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 김모(27)·안모(2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범행에 가담했던 서울·인천·부산 폭력조직 6개파와 광주 조폭조직 1개파 소속 조직원 35명이 모두 검거돼 이중 28명이 구속됐다.

수도권 폭력조직원들은 지난해 11월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

시30분 사이 광주 북구 한 모텔 주차장에서 광주 조폭 행동대원 A(24)씨의 뺨을 때리고 야구방망이를 든 채 협박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폭력조직원들은 같은 날 오전 3시에 광주 서구 한 술집 주변 골목에서 인천 조폭 B(25)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수도권 폭력조직원들은 인천 조폭 B씨가 광주 조폭들에게 폭행당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수도권 조폭들은 A씨 부모의 결혼식을 앞두고 광주 조폭들과 '축하 술자리'를 가졌으며, B씨

의 행패로 조폭간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과정에 '후배가 대든다는 이유로 광주 조폭을 술집 밖 골목으로 데려가 폭행했으며, 이를 본 광주 조폭 6명이 A씨를 집단으로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후 '광주 조폭에게 맞았다'며 수도권 조폭 후배 17명을 광주로 불러 보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들은 행동강령과 위계질서를 이유로 보복폭행을 주고받았다"며 "보복행위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영산강환경청, 하천주변

### 퇴비 관리부실 41곳 적발

#### 관할 지자체 조치 요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영산강 하천 주변 퇴비 보관상태 조사를 벌여 퇴비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41곳을 적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조치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영산강·황룡강·지석천 본류 구간 146km와 주요 하천 21곳 213km를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진행됐다.

조사 결과 퇴비 아적지 246곳 가운데 41곳이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전면에 방치하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으로 적발됐다. 나머지 169곳은 퇴비의 하천 유출방지 조치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36곳은 퇴비가 모두 사용됐다.

환경청은 조사 과정에서 하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 서 계도하거나 직접 조치했다. 적발된 41곳 퇴비 아적지에 대해서는 비가림 덮개 설치 등 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현행 '기축분뇨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지체는 퇴비의 유출·방지로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 퇴비 소유·관리자에게 보관방법 변경 또는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특히 퇴비 보관장소로 계속 활용되고 있는 198곳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환경청은 설명했다.

서은홍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